

충청권발전특별법(안) 제안방안

《 목 차 》

I. 제정목적	1
II. 기본방향	2
III. 법안의 주요내용	2
IV. 사업시행절차	5
V. 유사법률과의 비교	6
VI. 충청권발전특별법 초안	9

I. 제정 목적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각각의 발전잠재력을 공유함으로써 공동 번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이 지역에서의 혁신창출능력을 주변지역으로 전파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이익 창출이 큰 분야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분야, 산업구조의 상호 조정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 등에서 원활한 조정을 이루어 나가면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임
- 개별적인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충남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과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충북의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연계하고, 특히 낙후지역의 광역개발을 통하여 충청권이 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충청권발전특별법1)’(가칭)을 제정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현재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광역권, 특정지역, 개축지지역, 신활력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소도읍, 오지개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가 있으나, 제도내용이나 인센티브 등을 감안할 때 적용에 한계가 있음
- 또한, 현재 국회에서 법안 처리 중인 「연안권발전 특별법(안)」 및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과는 취지가 다르므로 별도 제정이 필요함
 - 연안권법: 연안권개발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절차간소화 도모
 - 서남권법: 서남권 등 낙후지역 개발지원, 투자유치 인센티브 도입
 - 충청권법: 충청권 통합경제권·통합관광권·통합교통망 발전지원, 중점개발구역 개발 등

1) 2007년 1월 충청권 종합발전 구상(안)에서 「충청권등성장거점촉진지구특별법」으로도 제안된 바 있음

II. 기본방향

☐ 충청권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충청권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경쟁력을 강화
- 통합경제권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교통중심기능 강화와 효율적 광역교통체계 구축
- 문화적 정체성을 갖춘 체류형 관광지대 조성

☐ 개발사업 시행지원 및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 투자촉진 지원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 마련

※ 지정절차: 계획안 작성(3개 시도지사 공동연구) → 공청회 개최 → 관계부처협의 → 국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건교부장관 지정

→ 기존의 국토정책위원회를 활용함이 타당하나, 별도의 충청권발전위원회를 설치함이 개발계획 반영 등 유리할 수 있음

○ 발전계획의 내용적 범위(안 제4조)

- 산업입지, 연구지원, 관광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 정비·확충 등을 중점검토대상으로 함

※ 충청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충청권에 대한 국가중추행정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생명바이오, 자동차 및 부품산업, 전자정보산업, 첨단문화산업 등 충청권의 제조업 육성과 산업의 집적화 및 연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충청권의 통합관광권 설정 및 관광산업고도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충청권의 통합교통망 및 광역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투자 등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III. 법안의 주요내용

1. 목적(안 제1조)

-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권지역의 상생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 지역을 국가중추행정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산업과 연구개발 및 관광산업간의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 지방시대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도모

2. 충청권발전계획 수립

- 충청권발전계획 수립(안 제4조 내지 제5조)
 - 충청권 상생발전시책(통합경제권, 통합관광권, 통합교통망 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

3. 중점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 중점개발구역 지정(안 제6조 내지 제7조)

- 중점개발구역 내에서 충청권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특별법	충청권발전특별법	연안권발전 특별법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구역	중점개발구역	연안권개발구역	낙후지역종합발전구역
지구	-	연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 연안권투자진흥지구	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

※ 지정절차: 개발계획안 작성 및 지구지정 요청(시·도지사) → 관계부처협의 → 국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건교부장관)

※ 지정효과: 국토계획법의 도시지역 지정,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산업단지 지정,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지정 등 8개 법률의 지구지정 및 계획 승인 의제

- 사업시행자 선정(안 제11조)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등
- 실시계획 수립(안 12조)
 -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시 산지전용허가 등 총 36개 법률 64개 인·허가 의제
- ※ 실시계획은 사·도지사 승인사항(2개 이상의 사·도가 포함될 경우 많은 면적의 시도지사)이며,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의견청취
- 토지수용(안 14조)
 - 단위사업별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권한의 제한적 인정

4. 사업시행 및 투자촉진 지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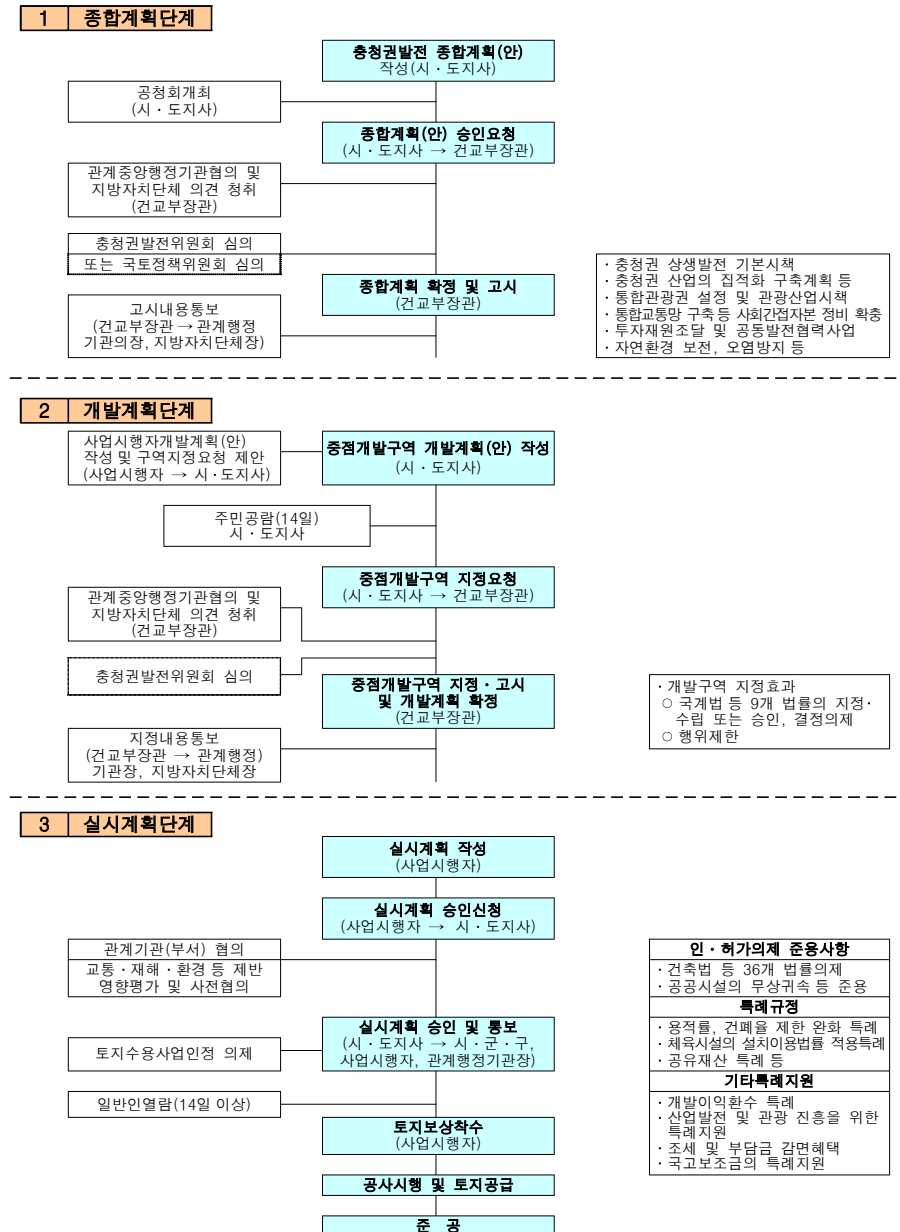
- 규제 특례 준용(안 제17조, 18조, 19조, 20조, 21조, 22조, 23조 및 24조)
 -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의료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 ※ 광역시도별 중점전략사업에 따라 규제특례 항목과 범위 추후결정

- 정부보조금 인상, 특별회계 등의 우선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융자, 조세·부담금 감면(안 제25조 내지 제26조)

5. 기타 특례적 지원범위

- 투자촉진 지원 관련(출자총액제 적용완화, 규제 특례 적용 등), 정주환경 개선 관련(사립학교 및 의료시설 특례등), 복합산업집적지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관련 법적 근거 추가

III. 사업진행절차



IV. 유사법률과의 비교

구 분	충청권발전특별법(안)	연안권발전 특별법안
목적 및 대상	• 대전 · 충북 · 충남 상생발전	• 남 · 동 · 서해안 연안권 발전 -연안에 연결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
정의	• 충청권/충청권발전계획/충청권 개발사업/중점개발구역	• 연안권/연안권발전종합계획/연안권개발구역/연안권개발사업
다른 계획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	• 좌동
국가 등의 책무	• 해당조문 없음	• 국가 및 시도의 책무 부여
개발계획과 사업절차흐름	<p><1단계>-발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입안→시 · 도의회 의 건청취→발전계획의 결정요청→국토정책 심의 및 중앙관계 기관 협의→발전계획 확정 및 고시 <p><2단계>-중점개발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개발구역 지정요청→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국토정책심의 및 중앙관계부처 협의→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 <p><3단계>-개발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입안(시행자) 및 요청(시 · 도지사)→국토정책 심의 및 중앙관계부처 협의→개발계획 승인 및 고시 <p><4단계>-실시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의 작성(시행자)→실시계획의 승인(시 · 도지사) 	<p><1단계>-발전종합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입안→시 · 도의회 의 건청취→발전계획의 결정요청→국토정책 심의 및 중앙관계 기관 협의→발전계획 확정 및 고시 <p><2단계>-연안권개발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구역 지정요청→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연안권발전위원회 심의 및 중앙관계 부처 협의→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 <p><3단계>-개발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입안(시행자) 및 요청(시 · 도지사)→중앙관계부처 협의→개발계획 승인 및 고시 <p><4단계>-실시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의 작성(시행자)→실시계획의 승인(시 · 도지사)
계획의 심의주체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심의위원회(기존)	• 국무총리 산하 연안권발전위원회

구 분	충청권발전특별법(안)	연안권발전 특별법안
개발구역지정 해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내 개발계획 미수립 • 4년내 실시계획 미신청시 • 사업완료 공고일 ※ 국토정책위 심의와 해제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내 실시계획 미신청시 • 실시계획 승인 · 고시일부터 2년내 토지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완료 공고일
고시 효과	지역지정 및 개발계획	• 국계법, 연안관리법 등 2개 법률의 지정, 수립 또는 승인의제
	행위제한	• 좌동
기초조사	• 해당조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조사 실시 • 타인 토지 점유, 출입허용 • 국계법 준용 손실보상 근거
실시계획 승인 인 · 허가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지법 등 36개 법률의제 -다른 법률상의 관계서류 제출, 관계기관 사전협의와 30일 이내 의견제출의무 등(경제자유구역 관련법과 동일수준) 	• 건축법 등 37개 법률의제
토지수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 승인시 사업인정 고시 • 토지수용은 중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보상업무위탁 규정 추가
공공시설의 귀속	• 국계법 제65조, 제99조 규정 준용	• 5개 항목 별도 규정
국공유지 처분제한	• 특례규정에 별도로 정함	• 개발계획 승인시 처분 제한
특례규정	•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8개법률에 관한 특례	• 국계법(용적 · 건폐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개발이익 환수	• 해당조문 없음	• 해당조문 없음

구 분	충청권발전특별법(안)	연안권발전 특별법안
산업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산업집적지구 및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지원 추가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지원, 연안권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 해양관광산업의 진흥 • 문화관광산업의 진흥
국고보조금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조율을 인상지원 • SOC는 국가가 우선지원 • 관광진흥기금 대여·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토지관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조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방지에 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규정
청문, 감독등의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조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등록, 지원 등을 취소하는 경우(도지사)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V. 충청권발전특별법 초안

제안이유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이익 창출이 큰 분야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분야, 산업구조의 상호 조정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 등에서 원활한 조정을 이루어 나가면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임.

개별적인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충남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과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충북의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연계하고, 특히 낙후지역의 광역개발을 통하여 충청권이 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충청권발전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충청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권지역의 상생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 지역을 국가 중추행정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산업과 연구개발 및 관광산업간의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 지방시대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청권"이라 함은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속한 지역을 말한다.
2. "충청권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라 한다)"이라 함은 충청권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동으로 입안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3. "충청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권발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4. "중점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충청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충청권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충청권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발전계획의 입안) ①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발전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시·도회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충청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충청권에 대한 국가중추행정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생명바이오, 자동차 및 부품산업, 전자정보산업, 첨단문화산업 등 충청권의 제조업 육성과 산업의 집적화 및 연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
4. 충청권의 통합관광권 설정 및 관광산업고도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충청권의 통합교통망 및 광역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투자 등에 관한 사항
7.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전계획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발전계획안의 입안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충청권발전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발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전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중점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변경 요청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있어서 지정대상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규모, 지정 또는 변경 요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국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2. 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4년이 되는 날
3. 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건설교통부장

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9조(충청권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

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충청권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지사의 개발계획 승인요청은 직접 또는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계획

6.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7.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충청권개발계획의 승인 요청은 제6조제1항의 개발구역 지정요청과 동시에 할 수 있다.

제10조 (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전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 또는 승인이 각각 있을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 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6.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7.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결정
8.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과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결정

제3장 충청권개발사업의 시행

제11조(사업시행자 등) ①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
5.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2 이상의 시·도에 개발구역이 걸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권자 또는 의견제시권자는 개발구역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행정구역이 포함된 시·도지사가 되며,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 또는 국가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개발사업시행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9.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 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

인

13.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5.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형질 변경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7.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 허가
19.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0.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2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

24. 사망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6.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7.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8.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협의.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제외한다.
 32.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4.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등의 사용심사
 35.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6.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 ②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토지수용) ①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수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 (준공검사) ①개발사업시행자(국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

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제17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①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농어촌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인 경우에만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동법 제77조 각 호의 시설 외에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개발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안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개발구역을 관할하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9조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21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안에서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 할 수 있다.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개발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제23조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①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재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제24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재정지원 등

제25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도로·상하수도·에너지공급설비·정보통신설비·용수시설·공

항·항만·선박·환경기초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확정된 정부지원 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포괄 지원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건설 또는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보조할 수 있다.

제26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 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법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존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과 유사한 절차를 거친 기존사업이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확정·고시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으로 지정·승인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유효기간 만료 당시에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